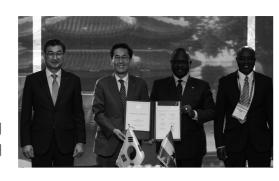
道公, 가나 도로부와 '도로·교통' 협력 손잡다

아프리카 시장 입지 강화 통해 서아프리카 주요 경제국 부상 도로・교통분야 사업 진출 기대

도로공사가 가나 도로부와 도로 교통 정책 및 계 획, 운영유지관리, 교통관리 등 도로·교통 전반에 대 한 협력관계를 위해 손을 잡았다.

선 호텔에서 가나 도로부(장관 프란시스 아센소-보아 케)와 도로·교통 분야 교류 활성화 및 상호 발전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 간의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5일 서울 웨스틴 조 도로·교통 정책 및 계획, 운영유지관리, 교통관리 등 로기대하고 있다. 도로 교통 분야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내 용이 포함됐다. 가나 도로부 아센소-보아케 장관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관련한 국토교통부행

사인 한 아프리카 인프라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는 가나에서 사업 시 작의 발판을 마련,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 화하는 한편 글로벌 도로 교통 인프라 개발 파트너 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나 정부는 국가 내 주요 도로 교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 제 성장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

함진규(왼쪽 두번째) 도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해외의 도로 교통 인프라 개발 사업 진출을 위해 노 /유경열 기자 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건설업 동일한 고용율 적용···합리적이지 못해"

■ **진단 / 박 광 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산환경 고려되지 못한 제도 '거부감' 업종 특성 반영된 의무 고용율 적용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 법)은 장애인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 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5조는 사업주의 책임 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 부 시책에 협조해야 하며,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하 게 평가해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고용 관리하도록 의 다. 건설업 생산을 통해서 공급되는 시설물은 부동산 무를 부과하고 있다.

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고용법 제28조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규 다. 현재 시공되는 시설물이 완공되면 현장 운영이 종 정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 용율은 1991년 1.0%에서 1992년 1.6%, 1993년에는 2.0%로 단계적으로 상향돼 현재 민간은 3.1%의 고 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의존적 용률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부 담금을 납부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규정 하고 있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주는 장애인 고용이 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도 취업을 통해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취업에 악된다. 한국장애인공단은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 도 높아질 수 있다.



소할 수 있는 수단의 제도화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는 제도 운영 방식은 민간에게 의무와 금전적 부담을 전가하

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수 🐧 450억원 미만 건설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긍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산업별 특성과 생산 환경이 고려되지 못한 제도 운영은 거부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이다. 토지에 정착돼 있어 이동할 수 없다. 당연히 생산 장애인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활동도 시설물이 공급되는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그 리고 대부분의 생신활동은 외부에 노출돼 고소와 지 하에서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추 락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 료된다. 그리고 다른 환경과 공간으로 이동해 새로운 생산활동이 진행된다. 재해 예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 기 어려운 구조이다. 생산요소 사용에서 노동 활용도 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인 생산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건설업의 재해율과 재 해사망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이다.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운영 과정에서 건설업이 재 해에 취약한 업종이며, 고정된 생산시설과 설비를 설 치할 수 없어 장애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설업도 장애인의 무고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건설업 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취업 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서도 파 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도

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훈련 과정 에서 건설업 관련 또는 건설시공에 관한 과정은 운영 되지 않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건설업에 취업 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를 해 할 수 있는 훈련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에는 훈련생모 집의 어려움, 즉 훈련 수요가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 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고용 극적인 의지가 있는 건설사업주도 구인난을 겪고 있 율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미달 다. 훈련 수요 부족은 장애인의 노동 공급 부족으로 시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장애인도 건설업 취업에 대해 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 금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 되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심각하 다. 재해 발생 요인 중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 인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옥외의 개방된 현장 환경에서 다수의 건설 근로자들이 변동되는 상황은 효과적인 관리의 어려 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생산활동이 진행되는 공 간의 특성과 환경도 재해예방 활동에 따른 효과를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화된 재 해예방 상황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약화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부담 금 납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 건설업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 예외 업종으 수 있다. 그렇다면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 의무고용 율이 적용돼야 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에 동일한 고 용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인식되는 제도가 계 속 운영된다면 거부감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실적인 의무 고용율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선이 전제돼야 건설업에서도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용어를 잘못 해석하거나 또 잘못되게 사용하여 프로젝트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많은 경험과 기량을 보유한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들이 국 내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선정하여 기준으로 삼고, 미국 PMI 에서 발간한 PMBOK 가이드의 용어를 참고로 용어집을 마련했다

Contract Work Breakdown Structure (계약작업분류체계)

서브 프로젝트를 계약하기 위해 공급자에 의해 개발되고 유지되는 작업분류체계 부분을 말한다.

Contractual Agreement (계약합의)

계약상 협의사항이 합의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험, 서비스, 기타 조항들의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포함된다.

Control (통제)

계획된 성과와 실제 성과의 비교, 차이의 분석, 가능한 대안 검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시정조치를 위하는 프로세스.

Control Account Plan (통제단위계획)

통제단위계획은 역무, 예산, 일정의 통합과 성과측정이 행해지는 관리계정임. 통제단위계획은 작업 분류체계의 선정된 관리점에서 발생한다. 작업패키지(Work Package) 참조.

Control Chart (통제도)

프로세스의 결과를 시간에 대비하여 설정된 통제한도와 함께 나타낸 도표. 이는 프로세스가 "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조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Control Limit (통제한계)

데이터의 예상된 변동을 반영하여 관리도상에 표시된 데이터의 정규 분포, 평균, 중심선에 3시 그마(표준편차)내의 영역.

Coordinator (조정자)

스텝 기능을 수행하며 독려자(Expeditor)에서 발전하여 더 높은 단계로 보고한다. 장점으로서는 작업할당이 가능하고 권한과 책임 증가하나, 갈등이 많고 상위관리자가 권한과 Power를 내놓으 려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러 부서간 연관 프로젝트에 대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Corrective Action (시정조치)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미래 성과를 계획과 맞추기 위해 취해지는 변경조치.

Cost (원가)

금전적 가치나 프로젝트 활동이나 부품의 가격으로 활동을 수행하거나 부품을 만들기 위해 요구되 는 자원의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특정 원가는 직접인건비, 다른직접비, 간접인건비, 다른 간접비 와 외주 구매비를 포함한 원가요소들의 집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획득가치 방법론 및 어떤 방법의 경우에 원가라는 용어는 금전적 가치로 전환하지 않고 단지 근로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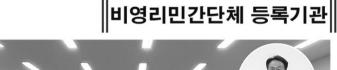
Cost Estimating (원가산정)

프로젝트 활동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한 원가의 견적을 산출하는 것.

주관/ 대한건설신문사 · 한국프로젝트경영협회

국가재난응급복구지원단체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자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회사업안내

- ◈ 국가에너지절약정책 실천 및 홍보
- ·국가에너지절약정책 실천, 매스컴홍보, 캠페인, 월간「열관리시공」지 발행
- ◈ 기술능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 교육
- · 난방공사 인정기능사 양성교육 · 난방공사 기술인력 법정교육
- ·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 · 누수탐사 자격취득 전문교육
- · 건축물 현장관리인 실무교육 ◈ 에너지설비 기술연구사업

ㆍ시공업관련 기술연구 사업

- ◈ 업계발전을 위한 법률 및 제도개선 업무
- · 가스법, 건설산업기본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안내
- · 시공업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 ◈ 회원 권익보호 업무
- · 불법시공 행위 실태조사
- · 시공업소 사후관리 지원
- ◈ 회원복지향상 업무 · 상조회 운영, 장학회 운영, 자매결연 등 지역 간 정보교류 및 업무지원
- ◈ 가스사고 및 하자피해 소비자피해보상제도 운영
- · 10억원 가스사고·하자피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 · 건축물준공용 시공확인서 발급
- ◈ 대민봉사, 재난관리 업무
- ·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활동 · 재해지역 보일러 무상점검 보일러 청소
- ▶ 에너지 나눔(사회공헌 활동)
- ◈ 법률 상담 업무
- · 회원사 법률분쟁 등 법무, 세무 상담 업무



02)847-6114 www.boiler.or.kr